

국가자공심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오수진 ■ 한국행정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출산가능한 남녀의 출산 의향과 국가자공심 간 관계를 분석한다. 즉, 국가자공심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 역시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출산 의향에 대하여 국가자공심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데 반해, 한국에서는 국가자공심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 즉 출산에 대한 의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공심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 의향과 국가자공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저출산, 출산 의향, 국가자공심, 정치적 안정성

I. 서 론

한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애국가’라 칭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수가 적거나 출산하지 않는 이는 애국자가 아닌 것일까? 수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24) 7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관련 대책을 공약으로

* 본 논문은 오수진(2023)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보완한 것임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연구원(E-mail: flawlessjin@kipa.re.kr)

내세우기도 했다. 언론과 학계, 정부,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저출산은 문제일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사회는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한 운영·재정 고갈·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介護保険) 운영방식에 따른 국가 재정난, 의료보험의 세대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은 2018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¹⁾ 연금이라는 제도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혜택이고, 공급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제도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받치고 있는 불균형적인 구조, 인구 고령화·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비 증가 등은 자칫 노인 세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농촌 간 불균형, 중앙·지방 갈등, 비혼 남녀의 증가, 청년의 빈곤을 심화, 연금제도에서 오는 세대 간 갈등,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에서의 특정 집단 과대표 현상 등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로 나타난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난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해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저출산·고령화는 이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경제적·정치적 이슈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수행 역시 우리보다 먼저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현재의 제4차 계획(2021~2025)에 이르렀다.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엔젤플랜(1995~1999), 신(新)엔젤플랜(2000~2004), 신(新)신(新)엔젤플랜(2005~2009), 자녀·육아비전(2010~2014), 자녀·육아신(新)제도(2015), 1억 총 활약 플랜(2016~) 등의 정책을 발표, 추진 중에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前) 일본 총리는 2017년 재선 이후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1)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 및 필요보험료에 관해서는 김형수(2018, 71-80) 참조.

두 가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약속했고(Yamaguchi 2017),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를 시작으로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피터슨(Peterson 1999)은 인구 감소 현상이 핵, 화학무기의 확산, 첨단 테러, 치명적인 슈퍼바이러스, 극단적 기후변화 등 세계적 위험 요소들 보다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세계적 고령화 추세는 경제위기를 촉발할 뿐 아니라 이 위기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피터슨(Peterson 1999)과 레인하트(Reinhardt 2000)의 지적처럼 저출산 및 고령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고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이 개인의 신념, 의지, 사고 등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태라고 볼 때,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가 소속된 집단 즉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문화를 주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문화는 정치체계, 정치과정, 정책 등 실제 정치가 작동되는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또한 정치 제도와 정치행태 등은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치의 역동 및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신명순·진영재 2022). 그러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 모든 인자들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 정치 역동 속에서 나타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 내 형성된 정치문화가 정치체계와 과정, 정책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인식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²⁾ 이에 서로 다른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적 요소 중 국가자공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의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장에서는 개인의 출산 의향에 대한 국가자공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2) 개인의 감정, 신념, 느낌 등 정치적 가치는 정치적 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개인의 정치 행태는 정치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개인의 인식 수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요컨대 개인의 인식 수준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정치문화는 정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신명순·진영재 2022).

는지 논의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를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경험적 분석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등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

저출산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양적(경험적) 연구이다. 즉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도 출산의 주체인 여성(여성의 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재경 외 2005; Billari 2008; Engelhardt & Prskawetz 2004; Goldstein & Jasilioniene 2009; Kohler et al. 2002; Lee 2009), 인구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오삼권·권영주 2018; 정성호 2009b; 주효진 외 2010), 인구경제적 요인에 더하여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한 연구(김영미 2016; 박수미 2005; 박수미 2008), 정책 대응(출산장려정책)의 미흡함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충환·신준섭 2013; Park 2020), 개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김나영 2011) 등이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각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교(조성호 2015)하거나 정책의 시사점을 논하는(강혜정·송효진 2017; 김진범 2011; 송지연 2019; 이성한 2018; 정성호 2009a; 최영진 2013) 질적연구 등이다.

앞에서 언급한 양적 연구들은 대부분 종속변수를 출산 의향(김중백 2013; 오민지 2021; 주효진 외 2010; 진미정·정혜은 2010),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김정석 2007; 이완·채재은 2017), 이상적인 자녀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김나영 2011; 전은화·전천운 2015), 출산율(김경아 2017; 오삼권·권영주 2018; 이충환·신준섭 2013; Adsera 2005; Basu 1999; Billari 2008; Henriette & Alexia 2004; Matthews 1999; Requena & Salazar 2014) 등으로 하고 있고 그에 비해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들은(Kalwij 2000; Weeden et al. 2006)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첫째,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 시점에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로 인해 실제 출

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출산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관계를 분석 및 예측한 것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 시점에 다자녀(2명 이상)를 낳겠다고 응답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자녀 수 0명), 1명을 출산한 후 더 이상의 출산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자녀 수 0명)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이후 개인의 환경 또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의 인구경제적 특성 혹은 해당 조사에서 출산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정한 변인에 대한 상황이 바뀐다면, 조사에 대하여 응답한 바대로 그 결과(출산 이행에 대한 결과인 자녀 수)가 조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출산율(합계출산율)은 출산율을 측정하는 시점의 각 연령 코호트별 자녀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아직 가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여성이 향후 추가적으로 출산할 자녀 수나 결혼은 했으나 출산 시기를 지연하거나 자녀 간 터울 조절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조사 시점에 출산한 자녀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김현숙 2007).

수년간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식은 청년 실업, 취업난 등이다. 비단 청년의 일자리 관련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 및 일자리 등은 우리 삶과 직결된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점차 결혼하지 않고 독신 즉 비혼을 선택하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곧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은 출산을 하지 않으므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만혼을 선택한 청년 역시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무자녀를 선택한다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또는 비혼 만혼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를 1명까지만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부부도 많아지면서 이 역시도 저출산 심화를 가중시킨다. 왜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을까? 왜 청년들은 최대한 결혼을 미룰까? 왜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일까? 결혼 그리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사회적·개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Beaujouan & Berghammer 2019; Jang et al. 2017; Mills et al. 2008).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고,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미비하다고 느껴서일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신³⁾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3)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냉소적 표현인 헬조선은 Hell(지옥)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지옥(hell)과 같은 한국(조선)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사용된다.

미치는 영향일 수 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지옥(hell)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둘도 많으며 하나 낳아 잘 키우자고 했던 80~90년대, 그 시절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되자 이들은 ‘헬조선의 노예’를 낳을 바엔 무자녀로 살겠다고 한다는 것이다(김현우 2023). 살만한 나라가 아닌 지옥 같은 나라라고 여기게 되고, 굳이 내 아이를 낳아 지옥 같은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이 내가 속한 국가에서 살아가며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저출산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 과연 여기에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없는 것일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선거에서의 대표성 문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고령자를 받치는 연금구조에 따른 세대 갈등, 정치과정에서의 고령 세대 이익 과다 대표로 인한 세대 균열, 국내 생산인력 부족에 따른 해외인력 유입으로 인한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연결된다. 그러나 정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사회·경제·정치는 유기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치적 요인은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정치학에서도 한일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송지향과 조화순(2022)은 한국과 일본이 상이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담론제도주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정부형태나 정당 시스템의 차이, 경제적 차이 등은 정책의 차이를 만들고,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태도에 정당이 중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보다 앞서 출산을 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실질적 대응 또한 먼저 시행한 일본에서는(Park 2020)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며 정책 집행 이전 대비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이혜리 2024). 뿐만 아니라, UN의 발표에 따르면 2060년대에도 합계출산율 1.5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출산율 감소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경제적·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문화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 국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집행과 그 효과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궁극적 목표 및 정책 효과로서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화적 요인을 탐색하고,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

4) <https://data.un.org/Data.aspx?q=fertility&d=PopDiv&f=variableD%3a54>. accessed 21 August 2024

존 논의에서 간과된 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공백을 일부 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출산과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national pride)은 국민이 국가 정체성의 결과로 자국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정서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이 한 국가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나 존경심으로 그의 국가 정체성에서 파생된다(Smith & Jarkko 1998). 국가자긍심(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개념적으로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는 다르며, 이는 애국심(patriotism)으로도 불린다. 즉, 국가자긍심은 감정적·정서적 측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Ha & Jang 2015), 해당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서운석 2009). 김기동과 이재복(2020) 또한 국가자긍심이란 ‘자신이 규정한 인지적 의미로서의 국가에 대해 심리적 혹은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착의 수준’으로, 사실상 애국심과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한다.

국가자긍심에 대한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국가자긍심과 애국심을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면서 민족주의와는 구분하는 것이다. 즉, 국가자긍심은 애국심과 공존하는 것으로 민족주의의 전제조건이지만, 국가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민족주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Doob 1964). 애국심은 한 국가에 대한 사랑 또는 그 국가에 대한 헌신적 충성인 반면, 민족주의는 다른 무엇보다 한 국가를 우선시하는 강한 국가적 헌신이다.

둘째, 국가자긍심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진정한 국가자긍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트레이시와 로빈(Tracy & Robins 2007)은 친사회적, 국가의 성취 등에 기인한 긍정적 정서를 진정한 자긍심(authentic pride)으로, 민족적 우월감이나 편견에서 기인한 자아도취적 정서를 오만한 자긍심(hubristic pride)이라 구분하며, 전자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자긍심이라 주장하였다. 자국의 성취에 대해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자긍심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 혹은 비교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박범섭·신정섭 2021).

셋째, 강한 국가자긍심은 정부 및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가자긍심이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구성된 간 강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Andrain & Smith 2006).

국가자긍심에 대한 마지막 논의는 주관적 행복과의 상관성이다.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정서인 국가자긍심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SWB, Subjective Well-Being)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Reeskens & Wright 2011).

앞서 설명한 이 네 가지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애국심이라 불리는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정서인 국가자긍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도 상관성이 있다. 만약 국가자긍심이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애착, 사랑 등 애국심과 그 결을 같이한다면, 이는 단기간에 체득되는 정서나 감정이라 보기 어렵다. 오랜 기간 자신이 속한 국가 안에서 다양한 환경의 변화 및 일련의 사건(event)들을 겪으며 체득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안정적이고(stable), 확립된(established)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높게 나타난다(Smith & Jarkko 1998). 이와는 반대로 인종 갈등, 범죄나 전쟁 등 부정적인 사건들은 국가자긍심 수준이 낮아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예로 동독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자긍심이 전쟁 이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平成 30年度)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13~29세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⁵⁾ ‘자국민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일본 젊은이들은 61.2%, 한국은 5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총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한국이 이들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높은 국가인 미국(80.4%) 대비 27.3%p, 일본 대비 8.2%p 낮은 수치이다. 리킨스와 라이트(Reeskens & Wright 2011)의 국가자긍심과 주관적 행복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결혼 및 임신·출산의 주체가 되는 청년 세대가 자신이 살고있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즉 심리적·정서적 애착 수준이 높지 않을 때, 주관적 행복감 역시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미혼 청년의 비혼화·만혼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아 출산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5)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3024511/www8.cao.go.jp/youth/kenkyu/ishiki/h30/pdf/s2-2.pdf>. accessed 21 August 2024

III. 연구설계

앞선 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본 논문의 기대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약 100개국에서 공통 설문지를 사용하여 인간의 신념과 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데이터이다.⁶⁾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 사례로 채택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이 유사하고,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인구 감소, 생산인력 부족, 연금개혁 등의 문제들을 이미 일본이 앞서 경험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양국에서 각각 대응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추진 정책의 포인트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공간적 범주로, 양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시행 시기가 비슷한 5차 조사(WAVE 5)~7차 조사(WAVE 7)를 시간적 범주로 한다.

5차 조사의 시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 2005년으로 한국에서는 1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일본에서는 신(新)엔젤플랜 종료 후, 신(新)신(新)엔젤플랜의 시작 단계였다. 6차 조사의 시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 2010년으로 한국은 1차 기본계획의 종료 연도, 일본은 자녀·육아비전의 시작 연도였다. 마지막으로 7차 조사 시기는 한국 2018년으로 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3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중반을 지난 시점이었고, 일본은 2019년으로 자녀·육아신(新)제도의 종료와 더불어 1억총활약플랜 시행 4차 연도였다. 따라서 각 조사 차수(WAVE)별로 한국과 일본 각 국가가 저출산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자녀 수에 대하여 국가자긍심의 영향력을 비교 확인한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만19~49세 기혼 여성과 남성의 자녀 수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 수를 조사한 문항(‘당신은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Have you had any children?)을 사용하였다. 자녀 수는 출산의 결과이

6) 약 5년의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사회조사로, 동일한 문항의 설문지를 통해 국가 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가치 등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각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며, 수집된 응답 자료(국가별 약 1,200개)는 엄격한 데이터 정리 절차에 따라 샘플링 설계 및 결과 간 일관성 검사를 실시한 후 공개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WVS 조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널리 사용되는 조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www.worldvaluessurvey.org, accessed 21 August 2024).

자 출산 의향에 대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결과인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각 조사 차수(WAVE)의 설문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가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은 자녀 수(출산의 결과)의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출산 가능 성인남녀(만 19~49세)만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서구 사회 대비 보수적이고 경직된 가족 형태를 취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 대상에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한 이유는 출산은 여성(아내)과 남성(남편)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여성(아내) 혼자의 뜻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성호·문승현 2021). 이는 종속변수가 왜 출산율이 아닌 자녀 수가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 출산율 지표는 합계출산율(TFR)을 사용하는데, 이는 여성이 50세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Hirschman 1994).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의 출산 의향(자녀 수)에 대한 국가자긍심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구경제적 특성, 민주주의 관련 가치관, 국가자긍심이 자녀 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측정 수준(levels of measurement)이 개인이 되어야 한다. 이에 출산율보다 개인의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녀 수에 대한 응답은 0명~7명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 1~2명의 비중이 가장 커, 본 연구에서는 이를 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가자긍심으로 그 측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자긍심은 자신의 국적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문항(How proud of nationality?)으로 1) 매우 자랑스럽다, 2)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경험적 또는 이론적으로 5차~7차 조사(2005년~2019년) 시기에 자녀 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인자들을 통계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수준, 정치 성향, 자국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인식이다.

7)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또는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등의 지표에서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연령 대상을 15~49세로 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였다(통계청 2021; United Nations 2022). 다만, 본 논문에서는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나 부부의 욕구 및 의지에 따라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남성 또한 포함하였다.

나이는 모든 조사(5차~7차)에서 만 나이로 응답하였는데, 출산 가능하다고 보는 만19~49세를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이 출산 가능한 연령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연령 구간별 응답자 분포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 만19~24세(1), 만25~29세(2), 만30~34세(3), 만35~39세(4), 만40~44세(5), 만45~49세(6)로 재코딩하였다.

결혼 여부는 각 조사 차수마다 1) 결혼(Married), 2) 동거(Living together as married), 3) 이혼(Divorced), 4) 별거(Separated), 5) 사별(Widowed), 6) 미혼(Single)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결혼’, ‘이혼’, ‘별거’, ‘사별’을 기혼으로, ‘동거’, ‘미혼’만을 미혼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동거(2)와 미혼(6)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기혼(1)으로 재코딩하였고, 기혼자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서구 국가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자녀를 낳는 데에 비교적 편견이 없다. 반면,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혼 남녀가 자녀를 낳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손승영 2007; Kirkegaard 2021; 森川美生 2021) 혼인은 출산의 전제조건이 된다(배두현 외 2023).⁸⁾ 한국과 일본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양 국가에서 미혼남녀의 출산은 극히 드물고 기혼자 중심의 출산이 이뤄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한다.

교육 수준은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으로 모든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지 않아 재코딩하였다. 5차~6차 조사에서는 정규교육 받지 않음(1), 초등 중퇴(2), 초등 졸업(3), 중등 중퇴(4), 중등 졸업(5), 고등 중퇴(6), 고등 졸업(7), 대학 중퇴(8), 대학 졸업(9)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는 교육받지 않음(0), 초등 졸업(1), 중등 졸업(2), 고등 졸업(3), (4), 2년제 대학 졸업(5), 학사 또는 동등(6), 석사 또는 동등(7), 박사 또는 동등(8)으로 구성되어 있어 5차~7차 조사의 교육 수준 문항에 대한 응답의 통일성을 위해 초등 졸업(1), 중등 졸업(2), 고등 졸업(3), 대학 졸업 이상(4)으로 재코딩하였다.

출산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성이 크기 때문에(조성호·문승현 2021)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

8) 비혼 선택은 출산을 거부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를 약속하고 결혼한다 해도 자신의 의지와 달리 떠밀려서 아이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즉, 출산을 거부하는 남녀는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는 반대로 결혼을 선택하는 남녀는 출산의 가능성 혹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 또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덩크를 선택하는 부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들을 통제 변인에 포함하였다. 즉, 소득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소득 규모(Scale of incomes)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분위(1)~10분위(10)로 측정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인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수준(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은 불만족(1)~만족(10)으로 측정되었다. 가구소득이 절대적으로 높은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을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가구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이에 소득의 절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소득 규모와 가정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정치 성향은 자신의 정치 성향(Self positioning in political scale)을 묻는 문항으로 좌(Left) 1점에서 우(Right) 10점으로 측정되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순응하는지 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순응하여 자녀를 출산하는지, 또는 정책에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타겟으로 설계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전 과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이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인식 문항 역시 통제변인에 포함하였다. 이 문항은 국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인식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How democratically is this country being governed today?)를 묻는 것으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1)-완전히 민주적임(10)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부록에 별첨하였다.

IV. 분 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국가자긍심에 주목하여 양자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자긍심은 일종의 애국심으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아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자신이 살고있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즉 심리적·정서적 애착 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행복감 역시 높고, 이는 청년세대가 결혼을 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출산 의향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델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⁹⁾

<표 1> 중다회귀분석 결과(5차 조사)

	Coef.(t statistics)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0.063 (1.02)	0.073 (1.19)	0.138 (1.17)	0.124 (1.00)
나이	0.240*** (9.64)	0.241*** (9.78)	0.186*** (3.18)	0.199** (3.30)
교육 수준	-0.102* (-2.09)	-0.095* (-1.97)	-0.247** (-3.01)	-0.229** (-2.68)
소득 수준	-0.011 (-0.51)	-0.007 (-0.34)	0.019 (0.72)	0.020 (0.72)
가정경제 만족 수준	-0.017 (-1.01)	-0.020 (-1.22)	-0.052 (-1.67)	-0.053 (-1.68)
정치 성향	0.005 (-0.00)	0.007 (0.15)	0.037 (0.91)	0.050 (1.19)
국가의 민주적 통치	0.041* (2.27)	0.312 (1.74)	-0.035 (-0.56)	-0.044 (-0.64)
국가자긍심		0.190*** (3.64)		0.027 (0.33)
Constant	0.815** (3.29)	0.271 (0.94)	1.863*** (4.09)	1.653*** (3.36)
N	498	498	238	223
R-squared	0.2129	0.2336	0.1264	0.1321
adj.R-squared	0.2016	0.2210	0.0998	0.0996

* p<0.05, ** p<0.01, *** p<0.001

한국과 일본 각 국가에서 각 조사 차수(WAVE)별 결과는 <표 1>부터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주요 변수라 가정한 국가자긍심(national pride)을 제외한 기본모형이며, <모형 2>는 기본모형에 국가자긍심을 추가한 것이다. <표 1>은 한국과 일본의 5차 조사(WAVE 5)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 두 개 모형에서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

9) 각 국가(한국, 일본)의 조사차수별(5차 조사~7차 조사) 기술통계량은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다($p < 0.001$).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만19~49세 사이(5세 단위 구분)의 기혼 여성·남성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이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여길수록 자녀 수에 정(+)¹⁰의 영향을 미쳤다($p < 0.05$). <모형 2>에서는 나이($p < 0.001$)와 교육 수준($p < 0.05$)외에도 주요 변수로 가정된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p < 0.001$)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기대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5차 조사가 수행된 2005년 한국의 경우, 출산 가능 기혼 성인 남녀(만19~49세)의 인구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 수에 정(+)¹⁰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육 수준과 출산 간 부(-)의 관계,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2005년은 한국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당시 평균 자녀 수는 당시 평균 자녀 수는 1.7명¹⁰)이었는데 자녀 수에 따른 응답자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수가 0명인 경우는 30명(5.98%), 1명인 경우 143명(28.49%), 2명인 경우 270명(53.78%), 3명 이상인 경우는 59명(11.75%)이었다. 즉, 전체 응답자 중 94.02%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p < 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p < 0.01$)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국가자긍심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같은 시기 한국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5차 조사 수행 시기 한국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이전인 데 반해, 일본은 이미 엔젤플랜('95~'99)을 시작으로 신엔젤플랜('00~'04)이 시행된 이후이며, 신신엔젤플랜('05~'09)의 시행 첫해였다. 따라서 시행 첫해인 신신엔젤플랜¹¹)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국과는 달리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양국 모두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연구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교육 수준과 출산 간 부(-)의 관계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관계의 방향성과 유의미성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조사 차수에서 국가자긍심이 출산 의향

10)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서 자녀 수를 0: 0명, 1: 1명, 2: 2명, 3: 3명 이상으로 재코딩한 데이터에서의 평균 자녀 수가 아닌 재코딩 이전(최소 0명 ~ 최대 6명) 데이터에서의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11) 신신엔젤플랜('05~'09)은 저출산을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노동력 감소 즉, 일본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여 다루었다. 이 계획에서는 정부, 개인,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Park 2020).

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친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양국의 차이점은 다음 차수들의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하여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중다회귀분석 결과(6차 조사)

	Coef.(t statistics)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0.077 (1.09)	0.070 (0.98)	-0.010 (-0.11)	-0.009 (-0.09)
나이	0.177*** (6.04)	0.174*** (5.82)	0.104** (2.52)	0.116** (2.55)
교육 수준	-0.153* (-2.54)	-0.119 (-1.95)	-0.082 (-1.33)	-0.093 (-1.47)
소득 수준	0.010 (0.41)	0.010 (0.39)	0.029 (1.36)	0.033 (1.53)
가정경제 만족 수준	0.023 (1.11)	0.015 (0.69)	-0.007 (-0.35)	-0.011 (-0.52)
정치 성향	0.010 (0.55)	0.008 (0.49)	0.007 (0.24)	0.008 (0.29)
국가의 민주적 통치	0.023 (1.26)	0.013 (0.71)	0.018 (0.69)	0.018 (0.67)
국가자긍심		0.131* (2.16)		0.088 (1.38)
Constant	0.980** (3.23)	0.596 (1.72)	1.121*** (3.53)	0.830* (2.31)
N	431	422	400	377
R-squared	0.1185	0.1202	0.0360	0.0497
adj.R-squared	0.1039	0.1031	0.0188	0.0290

* p<0.05, ** p<0.01, *** p<0.001

위의 <표 2>는 한국과 일본의 6차 조사(WAVE 6) 분석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 <모형 1>에서는 5차 조사와 동일하게 나이가 많아질수록(p<0.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p<0.001),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p<0.05)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차 조사가 수행된 2010년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임을 감안할 때, 앞선 5차 조사에서 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국가의 민주적 통치 변인이 설명력을 잃었다는 데 대하여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p < 0.01$)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가 기대한 바인 국가자극심의 출산 의향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 조사인 5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정(+)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6차 조사가 수행된 시기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수립·시행된 지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고¹²⁾, 전체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일·가정 양립 정책이 약 21%를 차지한 신신엔젤플랜('05~'09)의 종료 이후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출산가능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에 대하여 국가자극심이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6차 조사)에 일본의 경우, 지난 5차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나이 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변인이 없어 이후 조사 차수인 7차 조사 결과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변인의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은 한국과 일본의 세계가치조사(WVS) 7차 조사(WAVE 7)의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나이가 많을수록($p < 0.001$),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p < 0.05$)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5차~6차 조사 당시 자녀 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했던 국가자극심은 7차 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상실하였으나, 출산 의향에 대한 국가자극심의 영향력은 정(+)의 방향임은 변치않았다. 7차 조사 수행 시기 당시 평균 자녀 수는 1.7명으로 5차, 6차 조사 때와 거의 같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 95%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이다. 이전 5차 조사(94.02%), 6차 조사(94.04%)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2) 엔젤플랜('95~'99), 신엔젤플랜('00~'04), 신신엔젤플랜('05~'09)을 지나 자녀·육아비전('10~'14)의 시행 첫해이다.

〈표 3〉 중다회귀분석 결과(7차 조사)

	Coef.(t statistics)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0.100 (1.43)	0.101 (1.43)	0.130 (1.16)	0.124 (1.09)
나이	0.189*** (6.26)	0.190*** (6.26)	0.124** (2.68)	0.128** (2.68)
교육 수준	-0.014 (-0.49)	-0.014 (-0.49)	-0.046 (-0.71)	-0.042 (-0.64)
소득 수준	-0.059* (-2.02)	-0.059* (-2.03)	0.044 (1.70)	0.044 (1.65)
가정경제 만족 수준	0.050 (1.71)	0.044 (1.65)	-0.051 (-1.82)	-0.049 (-1.71)
정치 성향	0.001 (0.06)	0.001 (0.05)	-0.063 (-1.95)	-0.059 (-1.77)
국가의 민주적 통치	0.028 (0.97)	0.026 (0.92)	0.103** (1.84)	0.116** (1.87)
국가자극심		0.026 (0.40)		-0.071 (-0.83)
Constant	0.593 (1.74)	0.531 (1.42)	1.043** (2.69)	1.100** (2.73)
N	408	408	226	222
R-squared	0.1161	0.1165	0.0948	0.0988
adj.R-squared	0.1006	0.0987	0.0658	0.0649

* p<0.05, ** p<0.01, *** p<0.001

일본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p<0.01$), 국가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여길수록($p<0.01$)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7차 조사 수행 시기인 2019년 일본의 경우, 출산 가능 기혼 성인 남녀(만19~49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국가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여길수록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첫째, 당시 일본은 보수성향인 자민당이 집권 정당(12~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 집권 정당과는 반대인 진보적 성향일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5차~6차 조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국가의 민주적 통치 변인이 출산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같은 결과는 비록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나 당시 내각(內閣)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본 결과 점점 하락한 것과 관계가 있다.¹³⁾ 6차 조사('10) 이후 2011년부터의 일본 내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자민당 집권)의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과 동일한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을 가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7차 조사의 조사 시기('19) 직전 해인 2018년 12월 일본 언론 NHK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¹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 41%,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없어서'(35%)와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35%)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는 곧 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로 이어진다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추측건대,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 즉 내각에 대한 국민의 낮은 지지율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로 출산 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난 5차-6차 조사에서 비록 국가자공심의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방향성은 정(+)이었던 데 반해, 7차 조사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그 방향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이전 조사(5차-6차 조사)에서는 자녀 수 즉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인의 부상하였고, 반대로 이전 조사에서는 유의미하였던 변인이 설명력을 잃기도 하였다. 먼저 한국의 경우, 7차 조사에서 새롭게 부상한 변인은 소득수준이었으며 반대로 설명력을 잃은 변인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국가자공심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7차 조사에서 국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인식 변인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5차 조사에서 7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출산 의향에 대하여 각 변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또는 설명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조사될 세계가치조사 8차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일본 언론 NHK는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내각과 정당에 대한 지지 등 국민의 정치적 태도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매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뉴스에 보도한다. 2012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약 20%로 매우 낮았으나, 2013년 아베 집권 이후 내각 지지율은 큰 폭으로 올라 12월 조사 결과 50%였다. 이후 같은 해 3월과 4월엔 아베 내각 역대 최고치인 66%를 기록했으며, 2017년 10월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세계가치조사 7차 조사의 조사 시기인 2019년의 바로 직전 해인 2018년 12월 내각 지지율은 41%였다(<https://www.nhk.or.jp/bunken/yonon/political/2012.html>. accessed 17 May 2023).

14)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archive/2018_12.html. accessed 21 June 2023

V.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자긍심과 출산 의향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세계가치조사(WVS)의 5차 조사(2005년)~7차 조사(2019년)에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의 설문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출산 가능한 만 19세~49세 기혼 성인 남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국가자긍심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인구경제학적 요인 즉 교육수준, 경제활동 등에 초점을 맞췄고 정치적 요인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학문적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매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향 역시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출산가능한 연령 기혼 남녀의 국가자긍심 수준에 따라 출산 의향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이 설명력을 잃게 되거나, 영향력이 없었던 변인이 새롭게 부상하는 등의 배경에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정치적 환경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본 연구의 기대였고, 통계분석 결과 그 기대가 일부 확인되었다. 물론, 모든 조사 차수에서 국가자긍심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적 요인이 출산 제고를 위한 중요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정치학적 의의가 있다.

이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국가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즉,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무엇이 국민의 국가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에 대하여 갖는 자긍심은 정치과정, 정치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국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살 만한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강윤주·류호 2023).¹⁵⁾ 또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즉 정치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

15) 한국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안정 및 치열한 경쟁과 교육제도는 아이를 낳는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어야 한다. 최근 들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다(김영재 2023; 김지성·김유민 2023; 김현숙 2021; 양재진·장우윤 2023). 요컨대 그간 우리가 주목했던 요인들뿐 아니라 다른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국가자긍심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국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자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경쟁 과열, 노동시장에서 성별 및 육아에 따른 불리함, 비인기 과목의 의료인력 부족, 연금개혁, 젠더 갈등 해소,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 그 예다(김희삼 2023).

우리나라는 현시점 기준(2024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행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언론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란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통한 출산이 대부분인 나라에서는 비혼화, 만혼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출산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현숙 2021).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川本 敏 2018), 정책의 수요자 즉 이미 출산을 경험한 사람 외에도 향후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전면적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지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 등 단기적·직접적 효과를 내는 정책 수립 이전에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 구축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열된 경쟁사회, 지역·이념·세대·젠더 갈등이 만연화된 사회,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혼 청년이 결혼을 결심하고 그 이후에는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치학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경험적 분석

에 사용한 세계가치조사(WVS) 데이터는 4-5년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로 모든 연도별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패널데이터(panel data)가 아니다.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된 개인에 대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출된 결론의 일반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노정된 변인들 외에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가치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일본 사례와 비교함에 있어 양국에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 결과가 필요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 수준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문화로부터 기인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통계 모형에 있어서의 한계는 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 적절한 시계열 자료의 확보, 패널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컨대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국가자긍심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추후 연구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긍심이 정치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오랜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출산이라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기대했으며 그 기대가 일부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문화와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긍심뿐 아니라 다른 정치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인식 외에도 정부(또는 정치)에 대한 신뢰 정도, 정부(또는 정치)에 대한 만족도 등 정치문화로부터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이 국가자긍심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출산 의향에 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윤주, 류호. 2023. “대물림되는 ‘인구쇼크’... 절반세대 여성 45% “아이 안 낳겠다.”” 『한국일보』 (6월 13일).
- 강혜정, 송효진. 2017. “저출산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Crisisonomy* 13(2), 1-16.
- 김경아. 2017.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문화와 융합』 39(6), 895-924.
- 김기동, 이재목. 2020. “한국 유권자의 국가자긍심과 경제투표.” 『정치·정보 연구』 23(2), 29-58.
- 김나영. 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26, 5-24.
- 김영미. 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 사회』 112, 41-74.
- 김영재. 2023.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과 정책 방향: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2(4), 173-190.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 김지성, 김유민. 2023.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행정·정책학 연구 경향과 과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국가정책연구』 37(1), 97-122.
- 김진범. 2011.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국토』 352, 51-62.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_____. 2021.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8(2), 23-47.
- 김현우. 2023. “하나 낳아 잘 키워더니... ‘헬조선’에선 못 낳는다?” 『여성경제신문』 (5월 21일).

- 김형수. 2018. “OASDI와 CPP로 살펴본 국민연금 재정지표.” 『연금포럼』 71, 71-80.
- 김희삼. 2023. ““저출생”이라 불려도 직시해야 할 것.” 『매일경제』 (2월 1일).
- 박범섭, 신정섭. 2021. “한국, 일본, 대만에서 유권자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가 정부신뢰, 민주주의 만족도,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3), 131-166.
- 박수미. 2005. “가족내 성평등(Gender Equity)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36-44.
- _____.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배두현, 김빛나, 박지영, 김영철. 2023. “자식위해 많은 것 포기한 부모님 보며 비혼 결심[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8의 경고].” 『헤럴드경제』 (1월 20일).
- 서운석. 2009. “국민자부심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165-187.
- 손승영. 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담론 201』 10(1), 207-243.
- 송지연. 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35(3), 157-191.
- 송지향, 조화순. 2022. “담론제도주의를 통해 본 2000년대 한·일 저출산 대응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56(5), 173-199.
- 신명순, 진영재. 2022. 『비교정치(제6판)』. 서울: (주)박영사.
- 양재진, 장우윤. 2023.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조합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33-55.
- 오민지. 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삼권, 권영주. 2018.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1), 55-81.
- 이성환. 2018. “저출산·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47-166.
- 이완, 채재은. 2017.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65-78.

-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서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이충환, 신준섭.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 이혜리. 2024. “일본의 저출산 극복 노력...결국 기업이 해결했다.” 『이코노미스트』 (1월 29일).
- 전은화, 전천운. 2015. “맞벌이여성의 이상적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201-223.
- 정성호. 2009a.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_____. 2009b.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 과제.” 『사회과학연구』 48(2), 1-22.
- 조성호. 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보건·복지 ISSUE&FOCUS』 298, 1-8.
- _____, 문승현. 2021. “일자리 관련 요인과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62-279.
- 주효진, 광경희, 조주연.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영진. 2013. “일본의 저출산과 가족정책.” 『한양법학』 24(4), 215-243.
-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대전: 통계청.

영문 자료

- Adsera, Alicia. 2005. “Vanishing children: From high unemployment to low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5(2), 189-193.
- Andrain, Charles F. & James T. Smith. 2006. *Political democracy, trust, and social justice: A comparative overview*.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su, Alaka Malwade. 1999. “Women’s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in South Asia: Do men really not matter?” in *Critical Perspectives on*

- Schooling and Fertility in the Developing World*, edited by Caroline H. Bledsoe, John B. Casterline, Jennifer A. Johnson-Kuhn and John G. Haaga, 267-28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eaujouan, Eva & Caroline Berghammer. 2019. "The gap between lifetime fertility intentions and completed fert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 cohort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8, 507-535.
- Billari, Francesco C. 2008.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oring the causes and finding some surpris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2-18.
- Doob, Leonard W. 1964. "Patriotism and nationalism: Their psychological founda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3), 27.
- Engelhardt, Henriette & Alexia Prskawetz. 2004. "On the Changing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over Space and Time." MPIDER WORKING PAPER WP 2002-052.
- Goldstein, Joshua R., Tomáš Sobotka & Aiva Jasilioniene. 2009. "The end of "lowest 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699.
- Ha, Shang E. & Seung-Jin Jang. 2015. "National identity, national pride, and happiness: The case of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 471-482.
- Hirschman, Charles. 1994. "Why fertility cha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 203-223.
- Jang, Ikhyun, Miyang Jun & Jieun Emma Lee. 2017. "Economic actions or cultural and social decisions? The role of cultural and social values in shaping fertility intention."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2(3), 257-275.
- Kalwij, Adriaan S. 2000. "The effects of female employment status on the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3, 221-239.
- Kirkegaard, Jacob Funk. 2021. "The Pandemic'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o. PB21-16.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 José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the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8(4), 641-80.
- Lee, Sam Sik. 2009.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1), 57-70.
- Matthews, Beverly J. 1999. "The Gender System and Fertility: An Exploration of the Hidden Link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26(1), 21-38.
- Mills, Melinda, Letizia Mencarini, Maria Letizia Tanturri & Katia Begall. 2008.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tentions in Italy and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8, 1-26.
- Park, Eon Ha. 2020. "Ultra-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South Korea: Lessons from case of Japan." *Ageing International* 45(2), 191-205.
- Peterson, Peter G. 1999. "Gray Dawn: The Global Aging Crisis." *Foreign Affairs* 78(1), 42-55.
- Reeskens, Tim & Matthew Wright. 2011. "Subjective Well-Being and National Satisfaction: Taking Seriously the "Proud of What?" Question." *Psychological science* 22(1), 1460-1462.
- Reinhardt, Uwe E. 2000. "Health Care for the Aging Baby Boom: Lessons from Abroa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2), 71-83.
- Requena, Miguel & Leire Salazar. 2014.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The Spanish Case." *Journal of Family History* 39(3), 283-302.
- Smith, Tom William & Lars Jarkko. 1998. *National pride: A cross-national analysis*. Chicago, IL: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Tracy, Jessica L. & Richard W. Robins. 2007.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pride: a tale of two fac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506-525.
- UNdata. 2022. "Total fertility rate(live births per woman)." <https://data.un.org/Data.aspx?q=fertility&d=PopDiv&f=variableD%3a54> (accessed 21 August 2024).

- United Nations. 2022. *Handbook on Measur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rough Population Censuses*. New York: United Nations.
- Weeden, Jason, Michael J. Abrams, Melanie C. Green & Sabini John. 2006. “Do high-status people really have fewer children?: Education, income, and fertility in the contemporary U.S.” *Human Nature* 17, 377-392.
- Yamaguchi, Mari. 2017. “After Election Win, Abe Prioritizes North Korea, Aging Japan.” *The Chicago Tribune*, 23 October, <http://www.chicagotribune.com/nation-world/ct-japan-election-shinzo-abe-20171022-story.html> (accessed 10 February 2022).
- World Values Survey. www.worldvaluessurvey.org (accessed 21 August 2024).

일문 자료

- 內閣府(내각부). 2019. “我が国と諸外国の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平成30年度).” (6월 30일),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3024511/www8.cao.go.jp/youth/kenkyu/ishiki/h30/pdf/s2-2.pdf> (accessed 25 May 2023).
- 森川 美生(모리카와 미오). 2021. “現代日本における生涯無子女性の類型化および量的把握の試み-少子化政策の前提となる基礎データの検討-.” 『北海学園大学法学研究』 57(1), 63-81.
- 川本 敏(카와모토 사토시). 2018. “少子化対策の現状と効果的な対策の推進.” 『白鷗大学論集』 32(2), 1-25.
- NHK. <https://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2012.html> (accessed 17 May 2023).
- _____.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archive/2018_12.html (accessed 21 June 2023).

Abstract

The Impact of National Pride on Fertility Intentions: Focusing on South Korea and Japan

Sujin OH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national pride among men and women of childbearing age in South Korea and Japan. It tests the hypothesis that higher national pride is associated with a greater intention to have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the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explore this relationship. The findings reveal that in Japan, national pride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fertility intentions, whereas in South Korea,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ational pride and the intention to have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tical factors, such as national pride, should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birth rates.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how fostering national pride c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declining birth rat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national pride, this research offers implications for shaping future low birth rate policies and suggests that national pride might play a role in enhancing fertility intentions.

Key Words: Low Fertility, Fertility Intention, National Pride, Political Stability

부 록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A-1〉 기술통계량(5차 조사 - 한국)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502	1.713	0.749	0	3
통제	성별	502	0.540	0.499	0	1
	나이 ¹⁶⁾	502	4.382 (38.958)	1.270 (6.218)	1 (22)	6 (49)
	교육 수준	498	3.263	0.701	1	4
	소득 수준	502	4.978	1.663	1	10
	가정경제 만족 수준	502	5.701	1.969	1	10
	정치 성향	502	5.566	1.909	1	10
	국가의 민주적 통치	502	6.522	1.733	1	10
독립	국가 자긍심	502	2.984	0.575	1	4

〈표 A-2〉 기술통계량(5차 조사 - 일본)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366	1.760	0.938	0	3
통제	성별	373	0.563	0.497	0	1
	나이	373	4.383 (38.997)	1.356 (6.709)	1 (23)	6 (49)
	교육 수준	371	3.019	0.755	1	4
	소득 수준	354	4.729	2.588	1	10
	가정경제 만족 수준	352	5.773	2.208	1	10
	정치 성향	271	5.472	1.512	1	10
	국가의 민주적 통치	336	6.768	1.570	2	10
독립	국가 자긍심	337	2.626	0.769	1	4

16) 본 연구에서는 WVS(5차~7차 조사) 응답자 중 출산 가능하다고 보는 만19~49세를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Ⅲ. 연구설계’ 참조).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을 구간화하여 재코딩한 값이 아닌 본래의 값을 의미한다.

〈표 A-3〉 기술통계량(6차 조사 - 한국)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434	1.710	0.762	0	3
통제	성별	434	0.521	0.500	0	1
	나이	434	4.620 (40.055)	1.224 (6.077)	1 (20)	6 (49)
	교육 수준	434	3.339	0.632	1	4
	소득 수준	432	5.155	1.691	1	10
	가정경제 만족 수준	433	5.961	1.888	1	10
	정치 성향	434	5.235	2.050	1	10
	국가의 민주적 통치	434	6.023	1.917	1	10
독립	국가 자긍심	424	3.083	0.588	1	4

〈표 A-4〉 기술통계량(6차 조사 - 일본)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694	1.618	0.918	0	3
통제	성별	694	0.548	0.498	0	1
	나이	694	4.419 (39.128)	1.259 (6.295)	1 (18)	6 (49)
	교육 수준	681	3.009	0.757	1	4
	소득 수준	596	4.361	2.625	1	10
	가정경제 만족 수준	670	5.840	2.446	1	10
	정치 성향	503	5.338	1.675	1	10
	국가의 민주적 통치	577	6.681	1.932	1	10
독립	국가 자긍심	608	2.799	0.752	1	4

〈표 A-5〉 기술통계량(7차 조사 - 한국)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408	1.686	0.718	0	3
통제	성별	408	0.559	0.497	0	1
	나이	408	4.755 (40.850)	1.187 (6.024)	1 (20)	6 (49)
	교육 수준	408	3.233	0.845	1	4
	소득 수준	408	4.975	1.281	2	8
	가정경제 만족 수준	408	6.186	1.391	1	10
	정치 성향	408	4.907	1.626	1	9
	국가의 민주적 통치	408	6.975	1.202	1	10
독립	국가 자긍심	408	2.904	0.518	1	4

〈표 A-6〉 기초통계분석(7차 조사 - 일본)

변수		Obs.	Mean	S.D.	Min	Max
종속	자녀 수	396	1.833	0.864	0	3
통제	성별	396	0.601	0.490	0	1
	나이	396	4.482 (39.495)	1.276 (6.360)	1 (23)	6 (49)
	교육 수준	395	2.962	0.870	1	4
	소득 수준	365	4.871	2.478	1	10
	가정경제 만족 수준	389	5.820	2.413	1	10
	정치 성향	257	5.724	1.862	1	10
	국가의 민주적 통치	336	6.899	1.768	1	10
독립	국가 자긍심	375	3.005	0.746	1	4

